



영호남 4개 대학 나눔봉사단 발대식 조선대·원광대·영남대·동아대 등 '영·호남 4개 대학 나눔봉사단'이 22일 오후 조선대 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23~25일 광주 행복재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광주 행복재활원에서, 다른 팀은 대구 들꽃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천성관 “법질서 확립이 인권의 바탕”

검찰총장 내정 기자 간담회 “검찰 쇄신 요구 잘 알고 있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전격 발탁인사로 검찰 조직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천 내정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악재 속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천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남겨둔 부담 때문인지 2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대응 등과 관련한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으나 절제된 발언 곳곳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단서들이 엿보였다.

먼저 그는 자신이 내정된 배경에 대해 “(검찰 쇄신을 하라는 의미라고 보도한) 언론 보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며 “긴 호흡 뿐 아니라 짧은 호흡도 쉬를 것이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천 내정자와 가까운 검찰 관계자들은 그가 검찰 세대교체를 통한 인적 쇄신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이 3회나 뒤진 그의 내정자 지명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15명 안팎이 물러날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검찰의 핵심부가 50대에서 40대 중후반으로 교체될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젊은 검찰 간부가 주축이 되면 사열과 지연, 확연으로 얽힌 검찰의 구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져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전담한 대검 중앙수사부 역시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천 내정자는 그간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이었지만 중수부에 ‘메스’를 대는 일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된 상황에서 이를 넘겨버릴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천 내정자는 “검찰의 책임인 부정부패 수사는 어느 곳에선 해야 한다”면서도 “대검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에 잘 검토해보겠다”며 대검의 위상과 역할 변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가 공안 분야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검찰의 수장까지 오른 만큼 천 내정자의 2년 임기 동안 법질서 확립에 검찰 역할이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녕”을 수차례 강조했다. /연필뉴스

F1 8개팀 2010년 대회 불참 선언 배경과 전망

FIA 예산 상한제 도입 반발

〈국제자동차연맹〉

FOM 중재 나서...대타협 가능성 커 전남도 “해묵은 갈등 결국 해소될 것”

내년 영암에서 열릴 코리아 F1(포뮬러 원) 대회가 국제자동차연맹(FIA)과 F1 대회 참가팀 간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성공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F1대회 참가팀 중 8개 팀의 연합체인 FOTA(Formula One Teams Association)가 ‘내년 F1대회에 불참하고, 별도의 시리즈를 만들어 경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데에는 ‘FIA와의 협거투기’라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두 단체간의 이러한 갈등과 협거투기가 결국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페라리와 르노, BMW 등 세계 최고의 팀들이 F1에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도 반쪽대회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FOTA와 FIA간의 갈등 배경=이번 갈등은 FIA의 막스 모슬리(Max Mosley) 회장이 내년 대회부터 F1팀 예산 상한제(연간 4천만 파운드·한화 830억 원)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F1 팀들이 정면

으로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경기규정’을 갖고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FIA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경기 질체를 겪고 있고, 저예산 신생팀들도 F1대회에 활발하게 진출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팀의 예산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FOTA 측은 현대 기술문명의 총아인 자동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다는 F1정신에 위배되고 F1대회 인기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F1대회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페라리의 경우 팀 운영과 기술개발 등에 연간 4천여 원 이상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TA의 선제공격에 최종 엔트리 확정 못 해=페라리 등 FOTA 소속 팀은 예산 상한제 도입에 항의해 몇 차례 F1 대회 ‘보이콧’을 벌였을 정도로 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대회 최종 엔트리 확정 하루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FIA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대회 ‘불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여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독자적인 경주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F1대회 운영기구인 FOM은 대회 최종 엔트리 확정을 무기한 연기한 채 FIA와 FOTA 간 중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전남도는 두 단체간의 해묵은 갈등이 매년 빚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결국엔 갈등이 봉합됨으로써, 내년 대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60년 역사의 F1대회 브랜드 가치와 신생 시리즈 출범에 따른 리스크와 법률문제,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해볼 때 FOTA가 실제로 F1을 떠나 독자 레이스를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문제도 F1팀과 FIA 간 협거투기로 시작됨에 따라 막판 협상 등으로 인해 충분히 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만약 내년 영암 F1 대회에 FOTA 소속 8개 팀이 불참함으로써 대회가 줄속으로 치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 FOM 측에 계약 위반 등의 내용으로 법적적인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청 폐지 놓고 막판 고심

청와대 ‘국세청 개혁안’...외부 감독위원회 신설

청와대가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내정을 계기로 반세기 가까이 반복된 국세청의 부패 고리를 끊을 개혁안 완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세행정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인 ‘국세행정진화 방안’을 거의 완성했으나 한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국세청 개혁안이 거의 완성됐으나 마지막 한 가지가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초안에 담긴 골자는 미국 국세청(IRS)의 편제를 반영해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하고 ▲지방국세청 폐지를 통해 조직 구조를 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세무공무원 인원을 감축하고 고급 납세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세무행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부분은 지방국세청 폐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을 폐지하면 세무 조사권이 본청에 집중되고 ‘간부직’이 줄어들며 효과가

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선 지방청 폐지에 대해 저항의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세청은 물론 다른 경제 부처 내에서도 청와대가 지방청 폐지 방안까지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 출신이자 자신의 측근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장으로 내정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때 지방청 폐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 힘을 얻는 상황이다.

한편 백용호 내정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신문에서 국세청을 포함해 4개 권력 기관 표를 만들어 놓았던 국세청이 권력 기관인지 의문”이라며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부서의 하나로 정세 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행정 과정은 도덕성이나 청렴성이 기본이 돼야 정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연필뉴스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차질뎀 대통령이 임명

민주당이 22일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을 강력 저지키로 함에 따라 천성관 검찰총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의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일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정부의 임명동의안을 접수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관련한 뒤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 임명동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로 10일간의 말미를 국회에 더 주는 것이다.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절차를 생략하고 내정자를 정식 임명,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회의 인준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코리아 조이 여행사

234-3222

제주 2박3일 패키지

98,000 ~ 148,000

일본 - 크루즈 여행

카멜리아로 떠나는 류슈 온천 여행 4박 249,000 ~ (발라힘콘도)

대마고속페리로 떠나는 대마도 여행 3박 359,000 ~

남류슈 모래담이 온천여행 4박 399,000 ~ (고급호텔)